



해양부, 해사고등학교 '2+1체제' 도입추진 2년은 학교서 교육, 3학년땐 산업체 실습 산업현장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기대

해양수산부는 4월15일 해사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2+1 체제' 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2+1체제는 2년 동안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3학년이 되면 1년 동안 산업체에서 실습을 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실시하면 해사고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해기사 면허증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제도는 3학년 2학기부터 실습을 실시해 졸업 후 실습생 신분이 유지되고 취업이 불리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양부는 현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실습제도의 개선을 위해 교과과정 개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결과, 산업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양성 차원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또 지식·기술의 변화에 대응하

기 위해 다른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학생지원 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해사고등학교가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단순한 경제성의 잣대로 평가해선 안된다고 추후에도 정부, 학교, 업체가 힘을 모아 해사고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립해사고등학교(부산·인천)는 해양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4급 해기사 양성기관으로서 1990년대 중반까지 해기사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운물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에 걸맞는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토론회에는 교육부를 비롯하여 교사, 동창회, 학부모 등 학교측, 선주협회, 해운조합, 해기사협회, 선박관리업협회 등 해운단체, 국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지리정보체제 구축

국가의 해양지도기반을 조기에 확충하고 항만 및 연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항만 및 연안기본도가 제작된다.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박인섭)은 5월부터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울산·포항·마산 등 8개 무역항과 울릉항 등 4개 연안항에 대하여 항만 및 연안기본도 제작에 착수, 11월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조사원은 2010년까지 항만기본도 1,300종, 연안기본도 700종, 근해기본도 100종과 갯벌 및 연안환경 등 각종 주제도 400종을 제작하여 해양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며, 2001년부터 지금까지 부산 및 광양항 등 주요무역항 7개지역에 대한 항만기본도 등 320종을 제작 보급하였으며 올해는 항만기본도(1/5,000) 130종과 연안기본도(1/25,000) 20종을 제작한다고 설명했다.

항만 및 연안기본도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공한 해저의 상세한 수심, 각종 항만지리정보,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경계, 조석, 조류 등 다양한 해저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도면이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항만운영의 지도기반 정보제공은 물론 해양개발, 해양환경보전 및 해양수산 행정의 전반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구축사업과도 연계하여 바다와 육지가 하나가 되는 '디지털 국토'를 완성함으로써 전자정부(e-Government)구현에도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